

韓國 大學發展史에 비취본 大學設立 의미

宋 柄 淳
(嶺南大 教育學科)

1. 問題提起

大學發展史는 社會發展史와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대학에서 탐구된 학문과 지식은 社會發展의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

대학의 기능이나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어느 정도 公共性이 있는가와 社會性이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대학 설립의 이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대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설립 취지와 역할 수행에 있어서 대학이 지녀야 될 公共的 · 社會的 · 學問的 성격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낙관적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 실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성의 결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 유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 설립의 목적이 國家主義의이거나 個人主義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결과, 대학 발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教育 · 研究 · 社會奉仕의 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은 人的 · 物的 條件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인적 · 물적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教育 · 研究 · 社會奉仕와 관련된 眞理 探究와 創造의 活動을 自律的으로 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속이 빈 강정'과 같이 겉 모습만 그럴 듯한 대학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된 분위기를 갖추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즉 대학이 外部의 통제하에 놓여 外的 要因으로 말미암아 대학의 정신과 기능이 왜곡되는 경우, 대학인이 學內 · 外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뒷받침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學內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 간의 이해 관계가 상호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켜 학문 · 지식 · 생활 공동체로서 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 대학인 스스로가 無感覺 · 惰性에 젖어 대학 발전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인 스스로가 대학인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국가와 대학 운영에 관

게하는 대학 당국과 사학 재단 등은 대학에 자신들의 어떠한 이해 관계를 반영하기보다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가 성립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원에서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大學의 發展史와 관련하여 대학의 設立·運營 과정을 살펴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量的 成長에 따른 質 管理의 問題’는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줄곧 공감을 표시해 온 ‘문제 중의 문제’이다.

대학의 역사가 —喘한 한국 대학 발전사를 감안하면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쓴 대학인들의 노력과 그동안의 量的 成長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量的 成長의 이면에 質的 低下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음은 量的 成長에 따른 대학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대학을 대학답게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 유효 적절하게 강구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 대학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教育·研究·社會奉仕’의 ‘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을 評價切下시키는 중요한 단서라 생각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量的 成長에 따른 質的 低下’의 문제를 야기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학 설립 및 학생 수의 증가와 관련된 大學 政策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효 적절한 대학 정책이 강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설립의 취지가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대학다운 대학,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전을 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大學이 韓國社會에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8·15 해방을 기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학 발전사에 나타나 있는 대학 정책과 이들 정책을 배경으로 설립된 국·공·사립대학의 양적 성장 과정 및 설립 정신,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는 것

은 향후 대학 설립과 대학다운 대학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他山之石’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믿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批判的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大學政策이 大學設立과 發展에 미친 영향

양적 성장 과정에서 설립된 대학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高等教育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과소 평가할 수 없지만, 제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난립되어 왔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에 걸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취약점으로 정책의 빈곤을 들 수 있는데, 대학 정책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대학다운 대학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했다기보다 대학의 自律性을 통제하는 등 정치적 이해 관계를 대학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설립·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정권 교체기별로 살펴 봄으로써 대학 설립과 발전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美軍政—自由黨의 大學政策과 大學設立

해방 당시 단과대학 1개교, 초급대학 25개교, 각종학교 2개교 등 모두 28개의 高等教育機關이 1946년 國立 종합대학교로 서울大, 私立 종합대학교로 高麗·延世·梨花女大가 新制 4년제 종합대학교로 설립·발족한 이래 1959년에는 종합대학교 18개교, 단과대학 33개교, 초급대학 10개교, 각종학교 19개교 등 80개의 高等教育機關이 설립되었다고 할 때 이는 실로 엄청난 양적 성장이 아닐 수 없다. 10년 동안 4년제 대학(교) 수만 하더라도 51개교라는 대학이 새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大學設立 붐이 조성된 때는 美軍政에서 自由黨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이 開放的·自由放任的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방임적·개방적 대학 정책하에서 이루어진 이 시기의 대학 설립이 갖는 문제점과 설립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유 방임에 가까운 개방적 대학 정책은 한국 대학의 주축을 이루는 私學의 量的 成長을 가져오게 했다.

둘째,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된 한국 대학들은 처음부터 質 管理의 문제로 골치를 앓을 수밖에 없었으며, 대학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셋째, 不實한 大學設立은 이후 대학에 대한 統制 強化의 빌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大學의 自律性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끝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 정책은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대학 설립을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있었다기보다는 無政策의이었다는 혹평을 면하기 어렵는데, 이는 韓國大學에 구조적 모순을 안겨 주었고 대학다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5·16 이후 大學政策과 大學發展

1960년 당시 종합대학교는 18개교, 단과대학은 35개교로 대학(교) 수는 모두 53개교였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정부는 不實大學의 정리 및 대학 발전을 강구한다는 미명 아래 大學整備案을 마련하여 量的 成長 일로에 있던 한국 대학에 일대 개혁을 시도하였다.

1961년 대학 정비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부정 및 분규 대학의 정비, 대학의 지역적 분산, 인문계 감축 및 실업계 증강 원칙의 수립, 둘째로 국가 수요를 고려한 인재의 계획적 양성을 전제로 한 전국 대학생 수를 7만 명 선으로 제한, 셋째로 대학교육의 일반적 정상화 방안으로 경상비 30%(사립대학의 경우) 재정 부담, 교수 60세 정년제 채택, 대학 입학 자격 고사와 학사 자격 국가 고사제, 교수 연구 실적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넷째로 2차 국립대학 정비안을 통해서 지역에 따라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고, 동일계 학과의 단과대학 내로의 통·폐합, 다섯째로 3차 사립대학 정비안을 통해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책정된 정원 7백 명(지방 6백 명) 미만인 대학의 폐지, 동일 지역 내

에서 증부된 학과 수의 제한, 신학대학의 각종 학교로의 전환 등이다.

1961년 대학 정비의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整備前 大學 數는 국립 9, 공립 5, 사립 42, 야간대 15개교로 모두 71개교이던 것이 整備 후에는 국립 8, 공립 4, 사립 28, 야간대 5개교 등 모두 50개교로 무려 21개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62년도에도 大學整備는 拙速으로 作成된 문교부 原案이 다소 수정되어 단행되었는 바, 혁명 문교 시책 중 最大失策이라는 批判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첫째, 대학 정비 과정이 非民主的이었으며, 拙速的이고 종합성이 결여되었다는 사회적 여론이 분분하였다.

둘째, 정원을 급격하게 감축한 결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大學 全般, 특히 사립대학의 운영난을 초래했는가 하던 장학금 제도의 약화와 교원의 대폭 해고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셋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정비를 별도로 계획함으로써 대학 지방 분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고, 중등 교사 양성의 개편은 교원 양성의 모순을 노출하였다.

넷째, 대학 정비안은 표면적으로 대학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학생 선발권, 학위 수여, 학생 수의 증원과 감원 등에 대한 대학의 고유 권한을 정부 당국으로 이양하게 함으로써 획일적 행정 주도형의 학사 운영을 하게 했다. 또 대학에 대한 지시와 명령을 강화함은 물론 교수 연구 실적 심사제 등을 통해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압력을 가한 것도 사실이다. 더우기 '教育公務員法', '教育에 관한 臨時特例法'의 제정은 대학 정비안과 궤를 같이하는 일련의 조치로 교원의 노동 운동 금지, 학사 자격 고사제의 채택으로 대학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의 4·19 이후의 자율적 민주화 의지를 꺾는 도구로 사용되어 대학인 스스로의 대학다운 대학 발전 모색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73년 실험대학을 통한 大學改革은 실험대

학 운영에 직접 참가한 대학은 물론 실험대학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은 대학에 이르기까지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왔다.

實驗大學制度란 教科課程과 관련하여 종래 졸업 학점 160 학점을 140 학점으로 인하, 전임 교원의 확충, 실험·실습실 등 시설 확충, 계열별 학생 선발,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학 정책이었다.

實驗大學의 운영은 표면적으로 大學의 自律性 증대와 통제의 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개편, 교수 방법의 개혁, 학생 선발 개선 등을 비롯하여 대학 운영의 제도와 접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암암리에 정책 당국이 각 대학에 실험대학 제도를 강요한 결과를 가져와 특성 있는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7·30 教育改革과 大學發展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단행된 教育改革에 관련된 大學政策이 大學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30 교육 개혁의 주요 골격은 과열 과의 해소, 입시 위주의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입시 제도의 개선, 졸업정원제의 실시를 통한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이다.

졸업정원제와 관련된 대학 정책은 당시 대학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수의 양적 증가를 가져 왔는 바, 실로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7·30 교육 개혁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 대학의 양적 성장 과정을 보자.

1961년 5월부터 1963년말까지 단행된 軍政期間 동안 추진된 대학 정비는 많은 副作用이 노출되어 1964년에는 이 기간 동안에 정비되었던 대학들이 원상 복귀한 결과, 1965년 4월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수는 국립 12, 공립 2, 사립 56개교 등 모두 70개교였다. 1978년 문교 통계에 의하면, 4년제 대학(교) 수가 국립 15, 공립 1, 사립 58개교 등 모두 74개교로 나타나 있는 바 국립 3, 사립 2개교가 증가하였고 공립 1개교가 감소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반면, 1979년에는 '78년에 비해 국립 4, 사립 6개교 등 모두 10개교가 증가한 84개교를 기

록하고 있다. 1984년 문교 통계에 의하면, 국립 20, 공립 1, 사립 78개교 등 모두 99개교로 6년 사이에 무려 국립 5, 사립 20개교로 모두 25개교의 증가를 보이는 量的 成長을 이룩했다. 학생 수에 있어서도 1978년의 경우 고등교육 기관 학생 수가 30만 8천 7백 30명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1백 1십 9만 2천 9백 3십 6명으로 무려 8십 8만 4천 2백 6명의 학생 인구가 늘어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엄청난 量的 증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따른 학생 인구를 당시 대학이 기존의 시설과 여건으로 수용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사실이다.

7·30 교육 개혁 중 대학 정책의 핵심인 졸업정원제가 갖는 또다른 비판은 대학의 분위기를 극단적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내는 非教育的 측면을 자아내게 했다는 점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80년대초 실시되었던 졸업정원제와 대학 정책은 또 한번 한국 대학의 양적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파란과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外部의 公權의·物理的 힘으로 大學을 大學답게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大學發展史的 교훈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될 일이다.

3. 國立·私立大學 設立過程이 大學 發展에 주는 意味

한국 대학의 발전사를 살펴 보면 國立大學 設立과 私立大學의 設立은 서로 상이한 설립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발전사에 주는 의미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國立大學의 設立過程

國立 綜合大學校로서 서울대가 설립·발족된 것은 1946년 8월 22일이다. 서울대는 京城帝國大學과 서울 부근의 官·公立 專門學校 11개교를 통합하여 대학원과 9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미군정 102호에 나타난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안(國大案)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國大案에 의거한 國立 서울大의 설립은 국가 제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고등교육 기관간의 閉鎖主義를 극복하려고 한 점은 한국 고등교육 발전에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官·公立 전문대학 등·폐합은 특색 있는 다양한 대학의 발전을 강구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특히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법 제 7조에 명시된 대학 운영을 주관하게 될 관리 기구로서 理事會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理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교수 및 직원은 理事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주체인 이사회의 전원이 국정 문교 당국자의 결임으로 되어 있는 바 관료적·권위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시 1946년 7월 21일자 조선인민보에 게재된 '전문대학 교수연합회'의 국대안을 반대하는 건의문에는 "소위 국대안은 11개 전문대학의 자치권을 빼앗아 일개의 독재적 관리 이사회의 통제하에 두려는 데 본의가 있는 것으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대학 운영 관리 이사회의 구성을 이후 설립되는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私立大學 財團理事會의 中央集權의·官僚的·權威主義의 性格을 形成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地方 國立大學의 設立은 戰時聯合大學의 해체로 新設되었는 바 6·25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시 연합 대학의 운영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大學이 일시적으로나마 지방에 분산되었지만, 서울 수복 이후 서울 소재 대학들이 本大學으로 복귀하자 地方大學 設立의 必要性이 증대된 결과로 1952년 10월에 慶北大, 全北大, 全南大 등이 설치되었고, 1953년 釜山大, 忠南大, 忠北大, 1955년에 濟州大 등이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地方大學의 設立은 대학의 지방 분산에 신기원을 이룬 의미를 갖는다. 초창기에는 人的·物的 條件이 미비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그후 차관의 도입과 국고 지원 등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2) 私立大學의 設立過程

1948년 우리나라 대학의 사립:국·공립 비율은 19:8 이던 것이 1955년에는 33:10 이 되었고 1959년에는 40:14 로 사립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1948년부터 1959년까지를 흔히 자유방임적·개방적 대학 설립기로 보는데 私立大學 발전의 초창기에 政策當局의 自由放任的 知覺과 판단은 不實한 大學設立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 사립대학 발전사에 量的 成長에 따른 質的 低下라는 오명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방임적 정책 아래 일부 대학들은 창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반면에 또다른 한편에서의 不實化·企業化의 현상은 私學의 公共性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일게 했고, 정부 시책에 대한 현실적 또는 잠재적 비판 세력으로서 대학생의 현실 참여 의식이 증대된 사실 등은 外的 힘에 의해 대학 정비를 불러 일으킨 요인이 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한국 대학 사회에서 私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大學 發展史에 있어서의 私學의 공헌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과거 처럼 운영자들이 대학을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사업으로, 대학을 기업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던 또 다시 외적 통제와 지시의 빌미를 주게 되어 대학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私學財團과 운영자들은 창학 정신을 대학 발전의 정신과 결부시켜 教育·研究·社會奉仕의 세 기능이 원만하게 수행되는 대학다운 대학을 건설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모든 대학인들은 미래의 한국이 대학에 달려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씩없는 노력으로 동참해야 될 것이다.

4. 結 論

2000년을 바라보는 오늘날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미래 한국 사회의 비전을 대학에서 찾고자 하

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先導해 나갈 대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면, 과거 대학 발전을 저해한 요인들에 대한 反省的 熟考를 통해 대학의 본 모습을 굳건히 하는 대학다운 대학 발전의 준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대학의 설립과 발전에 직접 관련이 있었던 자유방임적·개방적 대학 정책, 대학 정비안, 실험대학, 졸업정원제 등의 일련의 정책들은 한국 대학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데 기여했다기보다는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을 난립시켰음의 成長에 따른 質的 低下를 유발하게 한 환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現實的·政治的 利害 관계를 대학에 반영하여 大學의 본질을 歪曲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는 없지만, 미군정기, 6·25 동란기, '70년대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의 양적 성장은 지나치게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바 質 管理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國大衆에 따른 서울大의 설립은 우리나라 종합대학교의 모델(model) 제시라 볼 수 있는데 대학 운영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관료적·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 특색은 한국 대학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6·25 동란중 新設된 地方 國立大學은 대학의 지방 분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로 말미암아 미군정기 이후 또 한 차례 대학 설립 붐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私立大學의 設立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지 못한 고등교육 정책을 민간 자본을 토대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난립된 많은 사학들로 말미암아 대학의 질 저하를 초래했는가 하면, 일부 사학 재단과 운영자들의 대학 사기업화에 의한 不實運營은 대학이 外部의 지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 발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당국은 大學教育의 環境調整者로서 대학을 육성함에 있어 통제자로 군림하기보다 後援者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됨은 물론 대학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필요한 行·財政의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 국가 독점적 대학관에서 탈피하여 特性 있는 大學 育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정부 당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예컨대 학생 선발, 정원 조정 등을 각 대학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당 대학 나름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각 대학은 教育·研究·社會奉仕의 기능을 수행하고 質的 發展을 꾀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教育의 中立性과 自主性의 이념 아래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대학의 질적 발전의 차원에서 外部의 統制로부터 自律性을 확보하는 일도 대단한 중요성을 갖지만, 內的 自律性 확보도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학 사회 내에서 모든 대학인들의 상호 협력은 물론이고 내적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 한국 사학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한 일부 사학 재단 이사회와 운영자들의 대학에 대한 私企業化 의지는 청산되어야 할 문제 중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대학 관계 당국과 사학 재단들이 창학 이념과 설립 정신을 大學의 公共的·社會的·學問的 성격에 맞추어 새로운 대학 발전의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재정적 투자에 인색하지 않을 때, 그동안 양적 성장을 통해 이룩한 한국 대학의 잠재력은 크게 발현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國家主義의 혹은 個人主義의 목적과 이해 관계가 반영되게 되면, 대학이 수행해야 될 本質的 사명이 歪曲됨은 물론 대학다운 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끝으로 강조해 둔다. *